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명: 중국농업 관련 정보수집 및 중국사무소 K-마루 추진 상황 점검
연구과제명: 세계농업정보

1. 출장 목적

- 정부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해외거점을 일원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K-마루 활성화 방안을 발표('25.12)함.
 - 우리 연구원 중국사무소는 베이징 지역 공공기관 해외현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26.7.15)하고, 연내 K-마루(POSCO 타워 K-마루 전용층) 입주를 추진하고 있음.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수산물품유통공사, 한국연구재단,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스코 홀딩스 등 총 14개 기관과 K-마루 업무협약을 체결함.
- 따라서 중국사무소 이전 관련 현장 점검 및 향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중국사무소 운영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
 - 중국사무소 K-마루 이전 상황 점검
 - 중국 현지 농업연구기관(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농촌경제중심)과 협력 방안 논의
 - 중국 내 농업 유관기관(주중 한국대사관 농무관, 농촌진흥청 북경사무소, aT 북경지사 등)과 협력 방안 논의
 - 중국 내 연구 유관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등)과 협력 방안 논의
 - 향후 중국사무소 운영 개선방향 방향 논의

2. 출장 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 기간

소 속	출장자	담당 역할	출장지	출장 기간
거시농정 연구본부	정학균 본부장	- 중국사무소 운영 개선 방안 도출 - 중국내 유관기관 협력 방안 모색 - K-마루 중국사무소 이전 상황 점검 등	중국 북경 (나등급)	2026.9.16.~ 2026.9.18. (총 2박 3일, 여비 2박 3일 산정)
대외협력실	차원규 실장	- 중국사무소 운영 개선 방안 논의 - 중국사무소 유관기관 협력기관 면담 - K-마루 중국사무소 이전 관련 기관 협의 - 중국사무소 업무파악, 현안 논의 및 중국 농업관련 정보 수집		2026.9.16.~ 2026.9.19. (총 3박 4일, 여비 3박 4일 산정)

* 정학균 본부장은 2박 3일, 차원규 실장은 중국사무소 업무파악 등 추가업무로 3박 4일

3. 일정표

일자	일정		비고
9.16.(수)	오전	· 김포 09:05 → 북경 10:25 / 대한항공 KE2051	
	15:00	· 농업 유관기관(농무관, aT 북경지사, 농진청) 회의	
9.17.(목)	09:30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CAAS-IAED)	
	11:30	· 연구 유관기관(산업연, 대외연, KOTRA, 수출입은행 등) 면담	
	16:00	· 포스코 차이나 면담	
9.18.(금)	09:30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면담 · 정학균 본부장 귀국 (북경 11:45 → 김포 15:00 / 대한항공 KE2051)	
	오후	· 중국사무소 업무 개선 방안 논의 및 Wrap-up	
9.19.(토)	오전	· 북경 11:45 → 김포 15:00 / 대한항공 KE2051	

4. 출장 결과

1) 북경 소재 농업 유관기관 간담회

○ 주요 참석자

- (원내) 정학균 본부장, 차원규 실장, 임영아 소장
- (원외) 주중 한국대사관 주동철 농무관, 농진청 중국사무소 정민웅 소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현진 부장, 임연정 팀장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9.16.(수) 15:30~18:0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경대표처 사무실

○ 주요 논의 내용

[중국 농식품 정책 및 공급망]

- 중국은 식량안보를 핵심 농업정책 목표로 두고 곡물 생산량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와 중국은 농업구조와 정책목표가 상이하므로 중국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여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농산물 공급망과 관련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능력 강화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외부 충격 발생 시 수입·유통체계가 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음.
-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망측면에서 중국에서의 해외 계약재배는 비상시 국내 반입 물량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으나, 평상시 국내 가격 하락 시 계약물량의 판매·폐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현지 판매·활용과 비상시 국내 공급을 결합한 상시적 공급망 모델 검토가 필요함.
-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는 농산물 또는 농업용 원료의 수출제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외 생산만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식품 안전관리 및 수출협력]

- 중국 농산물·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관심을 고려할 때 중국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와 현장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형 식품기업과 유통기업은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있음.
- 식품가공공장에서는 CCTV 등을 활용하여 생산과정을 모니터링하고 AI를 활용해 이상행위를 선별·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관리방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의 식품안전 및 관리

사각 지대는 여전히 존재함.

-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관리체계를 비교하여 벤치마킹 가능성과 실제 적용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산물·식품 안전관리체계 및 품질관리 실태를 주제로 한 포럼 또는 세미나 개최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섭외 및 개최일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필요도 있음.
- 또한 중국시장에서는 한국에서 선호되는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기보다 중국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행태에 맞게 현지화하는 전략이 중요함. 맛·식감·규격·가격·포장 등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제품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며,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구매행태·플랫폼 이용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농식품 유통환경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서비스, 뉴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온라인·뉴미디어를 활용한 소비자 접근전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향후 협력 방안]

- 중국 농식품 시장에 대한 현지 기반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국 소비자의 수요, 유통플랫폼, 식품안전성, 프리미엄 시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농식품 수출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원료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활용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음. 품목별로 중국의 생산능력·가격·품질·검역·수출규제 가능성을 분석하여 중국이 한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음.
- 한·중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를 확대할 필요. 상주연구원 제도와 기존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과제 등 협력 발전



북경 내 농업 유관기관 간담회

2)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간담회

○ 주요 참석자

- (원내) 정학균 본부장, 차원규 실장, 임영아 소장
- (원외) 후샹동 소장, 장닝닝 소장 보좌관, 한신루 기술경제연구실 부주임, 홍위 국제경제무역연구실 조교연구원, 뉴쿠위, 자원환경경제연구실 연구원, 왕옌 과학기술처 부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9.17.(목) 09:30~12:00
- (장소)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회의실

○ 주요 논의 내용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관련 논의]

-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변동은 국내 가격뿐 아니라 수입 상대국의 생산 및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생산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역시 대두 등 일부 품목에서 해외 의존도가 존재하며,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한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 생산능력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국토가 넓어 지역 간 생산위험을 일정 부분 분산할 수 있으나, 한국은 농경지와 국토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지역적 기후충격이 특정 품목의 생산량과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이도 논의됨.
- 농업경제발전연구소는 기후변화가 생산단계뿐 아니라 수확 후 관리, 유통, 소비·영양 등 식품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농식품 공급망 전체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
- 기후변화 → 농업생산 → 농산물 가격 → 교역 및 공급망 → 식량안보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중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음.

[농업의 스마트농업 및 농촌서비스]

- 한국 측은 AI·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방향을 설명함.
-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 분야에서 AI·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인력 확보가 농가의 기술 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함.

- 중국 측은 소규모 농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기계·전문인력·생산·수확·유통 서비스를 외부 전문조직이나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농업 사회화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 사회화서비스는 개별 농가가 모든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여러 농가가 서비스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생산비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함.
- 한국에서도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라 농작업 대행회사 및 민간 서비스 조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농 구조화의 규모화·기계화·전문화를 비교하는 공동연구 가능성이 있음.

[향후 협력 방안]

- 한국과 중국이 식량안보, 기후변화, 스마트농업, 농가소득 및 농촌발전 등에서 상당한 공통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이를 공동연구 주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특히 기후변화가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 유통 및 소비·영양 등 식품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후변화와 농식품 공급망 전체를 연계한 연구도 공동주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학술교류 측면에서는 양 기관의 학술지를 활용하여 한·중 공동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특별 세션 등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됨. 중국 측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영문 농업경제 관련 학술지와 KREI의 학술지를 활용한 연구성과 교류 가능성도 논의됨.
-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공동연구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상대국의 농업현장을 방문하고 공동조사와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양 기관 학술지 등에 발표 등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간담회

3)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간담회

○ 주요 참석자

- (원내) 차원규 실장, 임영아 소장
- (원외) 류청용 당위원회 서기, MATCHI 토지경제연구실 주임, 차오빈 농촌조직제도연구실 부주임, 썽썽샤 토지경제연구실 부주임, 리딩왕 토지경제연구실 조교연구원, 위안춘라이 토지경제연구실 조교연구원, 양신 식품경제연구실 조교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9.18.(금) 09:30~12:00
- (장소)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회의실

○ 주요 논의 내용

[농촌발전연구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관소개 및 협력 성과]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4년 12월 연구협력 MOU 체결 이후 10년 이상 상호 방문 및 학술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농업·농촌 발전, 농민소득, 농산물 유통·가공, 식품경제, 농촌개발 등에서 연구 관심 분야가 유사함.
- 농촌경제·농촌발전, 농촌관리·조직·제도, 도농관계, 농촌산업·지역경제, 농민복지, 생태환경, 농산물 시장·무역, 농촌금융, 토지경제, 농촌 인적자원, 정보화·도시화, 식품경제 등 연구하고 있음.
- 또한 학술연구와 정책자문, 학술지·연구보고서 발간, 학술 플랫폼 운영, 대학원생 양성 등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중국 측은 향후 인적교류, 공동연구, 주제별 세미나 및 학술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함. 특히 식량안보, 농촌인력 및 인재양성, 농촌개발, 농산물 유통·가공, 농업인 소득 등을 향후 공동연구가 가능한 분야임

[농촌진흥청 기관 소개 및 협력 방안]

- 중국 측은 한국의 농업기술이 실제 농가에 전달되는 경로와 기술보급 인력의 역할에 관심을 표명함.
- 한국 측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술개발·보급체계와 지방농촌진흥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보급 구조를 설명함.
- 특히 새로운 농업기술은 현장실증 → 시범사업 → 본격적인 기술보급의 단계를 거쳐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농가와 기술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함.
- 뿐만 아니라, 농협의 경우 농산물 판매·유통, 경제사업, 조합원 지원, 농

업기술 및 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농협이 현장 전달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함.

[농민 소득 안정 및 식품경제 관련 논의]

- 중국 측은 한국의 농민소득 구조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정책에 관심을 표명함.
- 한국 측은 농가소득이 농업소득뿐 아니라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농업소득의 비중이 전체 농가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함. 이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소득 위험관리, 농외·이전소득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수단을 설명함.
- 최근에는 농업생산을 통한 소득뿐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해지고 있음을 설명함.
- 중국 측 식품경제 연구자는 농촌지역의 식품가공·유통 활동과 농업인의 소득창출 및 농촌활성화 간 연계에 관심을 표명함.
- 향후 공동연구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 가공·유통, 농촌관광, 농촌지역 서비스산업, 농업인 소득 다변화, 식품소비와 농업 연계, 저탄소 농업 등 소비자 측면의 농업·식품정책분야를 제안함.

[중국 내 농업정책연구기관의 역할]

- 중국 내 농업·농촌 관련 연구기관은 소속 및 행정적 위상에 따라 정책과의 연계방식과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원은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가장 상위의 연구기관임
- 농업 관련 부처 또는 농업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및 기술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됨. 향후 각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연구분야 및 기관 간 협력구조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교류가 필요함.

[향후 협력 방안]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4년 12월 연구협력 MOU 체결 이후 10년 이상 상호 방문 및 학술교류를 지속해 왔음. 농업·농촌 발전, 농민소득, 농산물 유통·가공, 식품경제, 농촌개발 등 연구 관심 분야가 유사하여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함.
- 한국의 농협,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수행함. 이에 농협이 금융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집·유통, 경제사업, 조합원 지원 및 농업기술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함.

-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국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연금, 수입안정보험 등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비농업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 구조와 소득안정정책을 논의
- 11월 마추이핑 박사 등 연구자 방한 시 KREI,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농협 등 관련 기관 및 현장 방문 추진에 협조 요청
- 농협·농업기술 보급체계, 농민소득, 농촌산업, 현대농업 등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 및 공동연구 과제 발굴 등 향후 적극 상호 협력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간담회

4) 포스코 차이나 면담 및 사무소 이전 관련 점검

○ 주요 참석자

- (우리측) 정학균 본부장, 차원규 실장, 임영아 소장
- (포스코측) 하재철 부사장, 최남현 부장 외 현지직원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9.17.(목) 15:30~17:00
- (장소) 베이징 포스코센터 3층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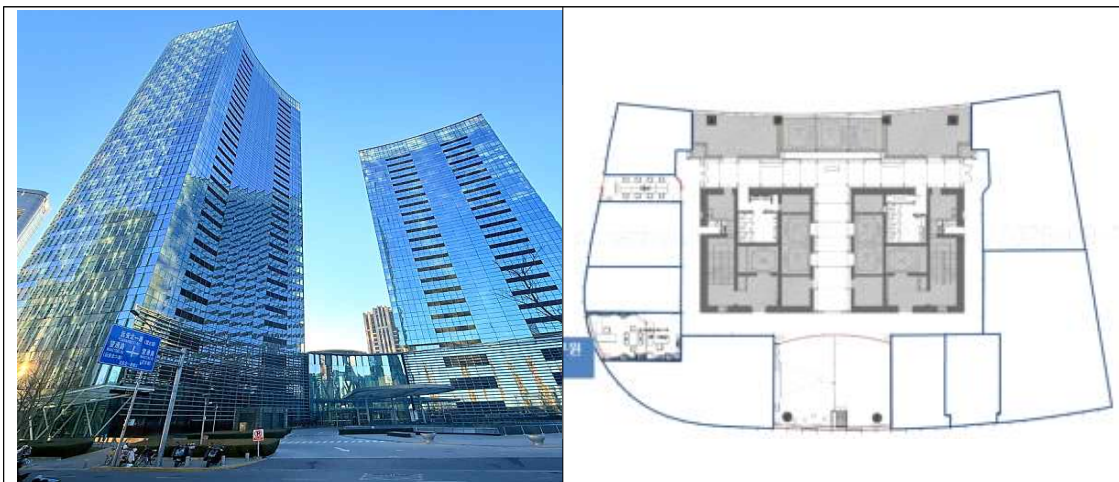
○ 주요 논의 내용

[사무소 이전 관련 논의]

- 현행 임차료 대비 K-마루 이전시 상당한 예산 증액이 발생
- 특히 현재 사무소는 전용면적 기준 임대료 산정, 관리비 무료임에 반해, 이전시 계약면적 기준 임대료 산정 및 관리비 추가 부가 등 2배에 가까운 임대료 발생
- 이에 포스코 차이나측에서도 12개월 렌트 무상 기간(3년계약기간 중 매년 4개월 무상렌트), 인테리어 및 이사 비용 지원 등을 제공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등에 대한 확보 및 지원이 필요

[사무소 이전 시기]

- (입주 시기) 11월 중 K-마루 이전 기관 현판식(재경부)이 있을 예정
- 재경부는 현판식과 상관없이, 기관별 사정에 따라 26년 내 입주하면 된다는 입장
- 현재 사무소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9월 중 완공 예정
- 10월 이후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며, 2026년 내 입주 시 동 기간은 추가로 렌트프리 적용, 매달 관리비는 지급 필요
- (사무소 이전 절차) 1차 북경시 농업농촌국, 2차 공안국 승인하에 사무소 이전이 가능. 계약체결 이후 정확한 주소를 바탕으로 이전 절차 시작. 현재 계약서 초안 검토 중
- 북경시 및 공안국 승인에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계약서를 제출하고 등기를 새로운 사무소 주소로 변경. 늦어도 10월 전 임대차 계약 체결 필요함.



왕징 포스코센터 외관 및 내부 도면



사무실 공사 현장

[노후 기자재 및 집기 폐기 및 구입]

- 현재 중국사무소 책상, 회의테이블, 의자, 책장 등은 노후화 되고, 신규 사무소 면적 축소로 사이즈가 맞지 않음.
- 사용하지 않는 집기, 노후화된 가구 등은 폐기 후 신규 구입 필요
- 폐기 및 구매시 기록 등 자산관리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사무소 기자재 노후 사진



미사용 기자재(폐기)



10인 회의테이블

[현지 인력 고용]

- 우리 연구원 중국사무소는 외국인 NGO로 분류되어 있음. 이러한 기관은 중국인 직접고용 불가로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 및 노무협약서 체결함.
-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지직원의 고용과 해고는 파견업체의 몫이나, 노무협약서에 "직원의 종신계약이 결정되면 그 기간의 근무를 중국사무소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존재함.
- 현재 고용된 현지 직원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고용 시작하여 현재 2

년 10개월 근무하고 있고, 현 고용을 유지한다면 27년 12월 1일부터 3번째 계약, 종신계약이 시작됨.

- 중국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경제적 보상금) 지급 시, 종신계약도 언제든지 해고 가능함.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사측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 1년 근속에 평균 1달 임금에 달하는 경제적 보상금 지급이 필요.
- 향후 퇴직금(경제적보상금), 예비비 등을 중국사무소 또는 본원에 자체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음

5) 시사점

[우리 정부 농업정책 현안 대응 강화]

- 현지 주중 한국대사관 농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담당자, 유관 기관의 요청 시 관련 자료 수집 및 작성 등 적극 대응
- 북경 소재 농업 유관 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유통공사 등)과 공동 보고 자료 작성

[중국 내 농업 관련 기관 연구 협력 강화]

- 중국에서 정책자료 및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연구기관·대학·정부 관계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중국사무소 주최 한중농업포럼 2회 개최(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개발 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농촌발전연구소), 농업부 농촌경제중심 과의 연구 협력 연계 역할
- ⇒ 중요한 현안 이슈에 대응하여 본원과 중국 내 농업관련 기관 간 공동 연구 주선

[중국 사무소 조사연구 기능 강화]

- 중국 농업정책·시장정보의 상시 모니터링
- 세계농업정보(계간)의 중국농업동향 파트(주요 현안 심층분석) 작성
- 중국 농업·농촌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기브리핑을 분기별 혹은 월별 작성하여 확대주간회의 시 공유

[예산 증액 필요]

- K-마루 이전에 따른 비용 상승분 고려하여 예산 확보 필요
- 현재 예산으로 임차료, 현지 인건비 등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한